

최근 중국의 무역구조 및 무역정책 변화와 시사점

< 요약 >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 동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수출과 투자가 크게 줄은 데다가 소비위축마저 겹쳐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국유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심화, 실업 증대 등으로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평균 17%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문제시되고 있다. 1997년 20.9%의 증가율을 보였던 수출은 1998년 0.5%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 부진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이들 지역의 수입 수요 감소와 위안화의 상대적인 고평가에 따른 제3지역에서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수출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 증치세 환급률 인상, 사영기업에의 수출입 권한 부여 등 다양한 장려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정부의 이러한 임시방편적 조치들보다는 기업들의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수출상품의 품질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하며, 특히 국유기업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수출 감소 및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된다면 중국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

다만 위안화 평가절하는 국제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중국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성격의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안화 절하에 대한 암묵적인 용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로서는 위안화 절하로 중국이 얻게 될 '수출 증대'라는 경제적 이득보다는 외채상환 부담 증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경제적 지위 약화, 홍콩 금융시장의 불안 가중 등의 손실이 더욱 크기 때문에 중국이 선불리 단행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수출애로가 지속될 경우 계속적으로 중국정부가 절하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강력한 의지를 고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산업구조 고도화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중국의 수출구조가 동남아, 한국 등 아시아 경쟁국들과 유사해질수록 현재의 위안화 고평가 체제로는 경쟁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위안화 절하는 시기상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위안화 가치하락에 대비해 품목별로 세부적인 영향과 대책이 필요하며, 대 중국 투자기업도 내수형·수출형 여부에 따라 영향을 달리할 것이므로 나름대로의 대책마련이 요구되어진다.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는 해외시장에서 우리와의 수출경쟁을 심화시키는 한편, 대 중국 수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대 중국 수출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국과의 경쟁보다는 산업간 보완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수입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기업의 대 중국 투자 확대는 관련 설비의 수출이 동반되므로 수출 확대차원에서 향후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 확대가 예상되는 정보통신, 금융, SOC 사업 등의 적극적인 진출이 요망된다. 다만 IMF 이후 우리기업의 자금부족으로 투자에 애로가 있다면 투자 유형의 방식을 기존의 합작 혹은 독자 투자에서 라이선싱, 중견 국유기업에 대한 M&A 등 투자 유형을 다양화시키는 한편, 일본, 홍콩, 대만 등지의 관련기업과의 합작진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 중국의 무역구조 및 무역정책 변화와 시사점

- I. 머리말
- II. 최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특징
- III. 중국의 무역정책 추진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
- IV.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I. 머리말

그 동안 외국인투자와 함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수출 회복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수출 장려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수출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이 급증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전년 동기대비 1/3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수출 감소는 비단 국제수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중국 경제 전반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내수 부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들은 수출 애로까지 겹쳐 더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수출 증대를 통한 경기회복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98년 이후 금리 인하, 증치세 환급률 인상, 사영기업의 수출입권한 부여 등 수출 확대정책을 펴는 한편, 강력한 밀수 단속, 철강 수입 규제 등 비관세장벽 강화, 수입대금 결제 요건 강화 등 수입 억제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 실적은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수출 부진은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부진 및 주요 경쟁국과 비교한 중국 위안화의 상대적 고평가에 따른 외부 요건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현재 중국은 추가적인 수출확대정책을 제시할 만한 여력이 별로 없다. 이미 금리 인하는 상당 폭이 이루어졌으며, 증치세 환급률 또한 거의 대부분의 상품이 마지노선까지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WTO 가입을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관세·비관세 장벽을 설치하기도 어렵다. 결국 단기적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는 '위안화 평가절하'가 거론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품질경쟁 중심의 수출구조를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수출부진 원인 등을 살펴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무역정책 및 향후 정책 방향이 무엇인 가를 검토한 뒤 이러한 변화가 우리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 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II. 최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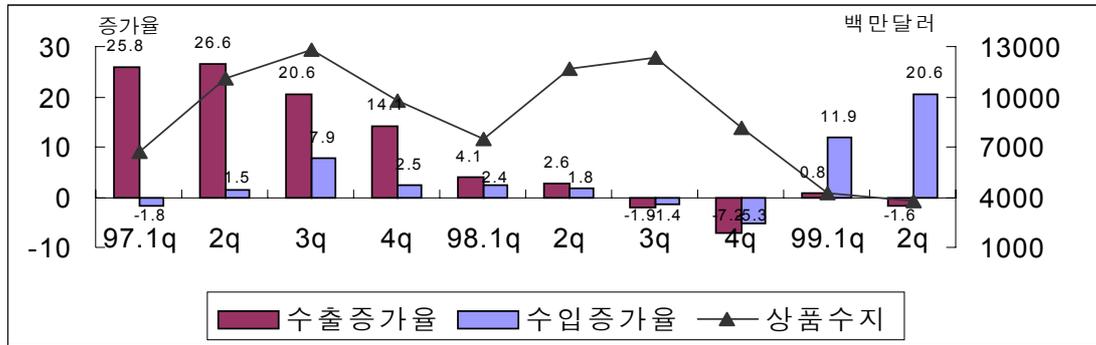
1. 수출입 동향과 무역구조 악화 원인

가. 상품수지 흑자규모 대폭 축소

97년 중반 아시아 외환·금융위기 발생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한 중국의 수출 감소 및 수입 증가 구조는 올해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98년 수출은 1,837억 달러로 전년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97년 20.9%의 증가율을 보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급격한 감소세이다. 수입 역시 정부의 강력한 수입억제정책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한 1,40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수출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로 인해 98년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사상최대인 436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 사정이 크게 다르다.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입은 증가추세로 반전되어 상품수지 흑자 폭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상반기 중 수출·수입은 각각 830억 달러, 7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상품수지는 8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는 등 여전히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증감률 추세로 보면 문제가 달라진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한 반면에 수입은 오히려 전년 동기대비 16.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즉 지난해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국면이 올해에는 정 반대로 수출 감소, 수입 증가 국면으로 반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동기의 226억 달러에서 1/3정도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림 1> 최근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과 상품수지 추이



자료 : 중국해관통계.

하반기의 상황을 보면 수출입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상반기의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소폭 증가세로 전환하여 연간 실적이 지난해 수준인 1,850억 달러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시아 지역이 서서히 경기회복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수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상무역국지위(NTR: Normal Trade Status) 자격 연장에 따른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다소 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수입증가세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정부의 지속된 경기부양책으로 일부 전자제품 등 소비재수입이 증가하는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재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총수입은 전년대비 약 20%정도 증가한 1,67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볼 경우 올해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작년 436억 달러의 1/3 수준인 150억 달러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나.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 원인

최근 중국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주요 수출경쟁국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위안화 가치의 상대적 고평가, 그리고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1997년 중국 수출의 31%를 점한 아세안 4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NIES(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실질GDP성장률은 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5%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1998년에는 정반대로 -5% 이상의 급격한 침체를 보였다. 선진권 지역에서는 역시 총 수출의 16%를 차지하는 일본이 1997년 -0.4%에서 -2.8%로 경기침체의 골이 깊

어졌다. 결국 일본을 포함해 총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지역의 경제침체 확산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는 중국 수출을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유럽 등의 여타 선진권 국가들이 예년과 비슷한 2~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대 중국 수입비중이 높아진 것이 중국으로서는 다소의 위안이 되었다.

둘째, 주요 수출경쟁 대상국인 동남아 및 한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통화 가치 하락으로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써 미국시장에서의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 대한 상품별 수출 경합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과 수출상품의 구성이 유사한 국가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며, 중남미 등 다른 지역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수출경쟁관계가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수출경쟁이 가장 심한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경쟁을 보이고 있었으며, 태국과 필리핀도 상당히 높은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중남미와의 수출경쟁지수는 0.14에 불과해 거의 수출경합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미국시장에서의 각국의 수출경쟁지수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중남미	중국
태 국	0.97	0.72	0.90	0.04	0.75
필 리 핀		0.67	0.93	-0.02	0.74
인도네시아			0.45	0.29	0.95
멕 시 코				0.07	0.50
중 남 미					0.14

자료 : 新宮健 外4. “減速する中國經濟と人民元切り下げ觀測”, 「財界觀測」, 野村綜合研究所, 19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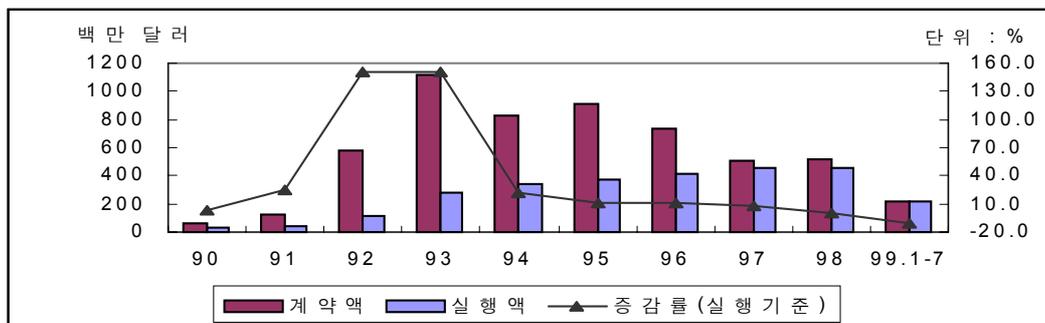
셋째, 외국인투자 감소는 향후 중국 수출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대부분 제3국으로의 수출을 원하는 수출형 투자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투자의 증감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중국의 수출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98년 말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교역량이 총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사실로 보면 외국인투자 증감이 중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다¹⁾.

1) 중국의 총 수출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비중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함.

계약기준 외국기업들의 대 중국 투자는 1993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투자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1998년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계약기준의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실투자가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계약기준 투자가 실행기준의 투자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행기준 투자가 감소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외국기업들의 대 중국 투자인식이 보다 현실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대변해 준다. 즉 과거와 같이 단순히 저임금과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막연한 생각 하에 우선 투자하고 보자는 인식에서 한발 물러서 중국의 실상을 사전에 점검해보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투자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투자 증감률 측면에서 보면 중국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이미 1996년이래 대 중국투자는 1998년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20% 내외의 급격한 감소율을 보였다. 실행 기준 투자 증감률을 보더라도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 1-7월중에는 1990년대 들어 처음으로 -10.0%로 반전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외국인투자의 감소는 향후 중국 수출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그림 2>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中國主要統計指標 1999년」 등.

한편, 1998년 감소세를 보였던 수입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1998년 중국의 수입 감소는 주로 정부의 금융·외환위기 대처 및 일정수준의 상품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밀수 단속 등 강력한 수입억제정책 추진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수입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를 중국이 완제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지니고 있는 특성상 수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에 따른 관련 설비와 원부자재의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수입감소정책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중국기업들의 자본·기술 집약적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데 주요 수입상품은 기계설비, 사무용 기기 등의 공업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수출구조 변화의 특징

가. 지역별로는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급감

지역별 수출동향을 보면 대 아시아 수출이 감소세로 반전된 반면에 미국과 유럽지역의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수출감소는 주로 아시아 지역의 경제침체에 따른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수요 감소에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아시아 NIES 4개국과 아세안 4개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각각 29.0%, 30.2%로 중국 전체 수출증가율인 20.9%를 크게 넘어서는 호조를 보였으나 1998년에는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9.3%, -22.0%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일본경기의 침체로 1997년 3.0%의 증가율을 보였던 대 일본 수출도 1998년에는 -7.2%로 돌아섰다.

게다가 98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대 미국, 대 EU 수출도 올해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중국의 수출 감소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1997년 대 미국 및 대 EU 수출은 각각 22.5%, 20.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1998년에도 각각 14.7%, 21.0%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어도 중국 전체의 평균증가율 0.5%를 훨씬 넘는 견실한 기초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9년 2/4분기중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은 각각 9.1%, 2.6%로 크게 감소하였다. 다행히 일본, 한국 및 아세안 국가들의 경기가 올해 들어 서서히 회복기조를 보이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중국 수출도 서서히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어 98년까지 아시아 감소, 미·유럽 증가라는 수출패턴이 올해 들어 아시아 증가, 미·유럽 둔화기조로 바뀌어 감에 따라 총 수출의 60% 이상을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향후 수출 증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1999년 상반기중 주요 수출 대상국의 변화내용을 보면 먼저 대 홍콩 수출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결과, 미국이 처음으로 홍콩을 제치고 제1위의 수출 대상국으로 올라섰다. 1998년 상반기와 1999년 상반기 중 중국의 대 홍콩 및

대 미국 수출비중을 비교해보면 홍콩은 23.8%에서 18.1%로 감소한 반면에 미국은 19.2%에서 21.9%로 상승하였다. 대 일본 및 대 한국 수출은 1998년 상반기 마이너스에서 1999년 상반기에는 플러스로 반전되어 여전히 제3위와 4위의 수출 대상국에 위치하고 있다.

<표 2> 국별·지역별 수출 추이

구분		95	96	97	98	99.1/4	99.2/4
수출합계 ('98비중:100.0)		22.9	1.5	20.9	0.5	0.8	-1.6
미국	(20.8)	15.1	8.0	22.5	14.9	16.0	9.1
일본	(16.4)	31.9	8.5	3.1	-7.2	3.7	5.4
NIES	(28.2)	18.5	-4.7	29.0	-15.9	-14.2	-11.0
홍콩	(20.6)	11.2	-8.6	33.0	-15.2	-23.8	-15.2
한국	(3.5)	52.0	12.3	21.5	-31.6	17.8	18.7
대만	(2.1)	38.2	-9.5	21.2	11.3	8.7	0.0
싱가포르	(2.0)	36.9	7.1	15.2	-10.9	6.8	26.8
아세안4	(3.0)	44.6	-7.9	30.2	-5.6	21.9	5.3
EU	(16.0)	30.9	3.9	20.1	21.0	2.9	2.6

단위 : %

주1) %는 전년 혹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말함.

주2) 아세안4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4개국임.

자료 : 중국해관통계.

나. 경공업 제품의 수출경쟁력 약화

상품별로 보면 그 동안 중국의 주력수출상품이었던 섬유, 피혁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기계·전기, 수송기기 등의 자본재 수출이 여전히 견실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중국의 품목별 수출구조가 점차 경공업제품 위주에서 중화학공업제품 위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1997년까지 중국의 최대 수출품목은 섬유제품(방직원료 포함)이었으나 1998년 들어서는 기계·전기제품이 총 수출액의 23.7%를 차지하여 섬유제품(22.0%)을 누르고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표 3> 참조).

<표 3> 품목별 수출 비중 및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분	95	96	97	98	98.1/4	98.2/4	98.3/4	98.4/4	99.1/4	99.2/4
수출합계('98년 100.0)	22.9	1.5	20.9	0.5	13.8	2.6	-1.9	-7.6	0.8	-1.6
섬유제품 (22.0)	4.8	-2.5	23.5	-6.3	15.7	1.1	-12.1	-21.5	-12.6	-17.0
기계·전자제품 (23.7)	40.3	12.2	23.1	14.0	28.5	13.8	10.6	10.5	12.1	19.3
광물자원 (6.8)	76.8	-13.8	28.7	-6.4	3.4	-1.0	-13.2	-12.0	-1.2	-11.8
가구·완구류 (7.3)	15.5	7.0	25.2	6.0	22.4	9.7	6.3	-4.3	10.1	4.1
신발·우산류 (4.7)	10.4	6.6	20.1	0.8	5.8	9.8	-8.1	-8.3	-1.6	-1.9
화학제품 (5.3)	64.8	0.0	11.4	2.7	8.3	8.2	-2.4	-2.2	3.9	-5.6
천연자원 (3.5)	34.0	9.7	16.6	-24.2	-17.9	-37.6	-3.1	-32.0	-24.9	-11.3
수송기계 (3.5)	45.2	1.5	26.1	21.3	52.1	22.5	19.1	17.2	29.0	6.9
플라스틱제품 (3.4)	37.0	3.2	31.1	6.4	27.6	20.0	0.4	-12.6	-0.3	-7.3
가공식품 (2.3)	20.5	9.6	-8.3	-7.9	11.6	-15.0	3.7	-0.9	24.1	-0.2

주) 전년 혹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중국해관통계.

이렇듯 경공업제품의 수출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남아 국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금융문제와 원자재·부품 등의 수입 급감으로 수출 또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최근 경제가 안정되어 가면서 점차 중국과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다. 국유기업의 수출기능 약화

중국의 기업형태별 수출추이를 보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유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역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국유기업은 일반무역이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투자기업은 80% 이상을 가공무역형태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공무역에서는 주변국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재 가격 하락이 수출가격에 반영되는 반면, 일반무역에서는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산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가격 하락여지가 작은 상태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수출부진은 외국인투자기업보다는 아시아 경쟁국들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국유기업들의 수출부진이 더욱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국유기업의 수출은 1998년 5.8% 감소한데 이어 금년 상반기 중 다시 12.8% 감소세를 보인 결과 중국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70%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50% 미만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 또한 1996년까지 매년 30% 이상의 커다란 증가

세를 보였으나 1998년 이후 그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97년과 98년에는 각각 21.7%, 8.0%로 떨어졌고, 금년 상반기에는 다시 5.6%로 저하되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기업들과는 달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총 수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여 오히려 국유기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업형태별 수출 추이

	수출비중	95	96	97	98.1/4	98.2/4	98.3/4	98.4/4
수출합계	100.0('97)	22.0	1.5	20.9	13.8	2.6	-1.9	-7.7
국유기업	56.2	16.8	-13.2	19.3	8.4	-1.1	9.8	-15.8
집체기업	2.5	12.5	34.7	47.5	44.6	33.4	17.7	-5.4
외국인투자기업	41.0	35.0	31.1	21.7	18.5	6.9	8.0	2.2
기타	0.3	27.0	20.1	33.5	-14.1	51.2	16.2	-5.9

단위 : %

주) 전년 혹은 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중국해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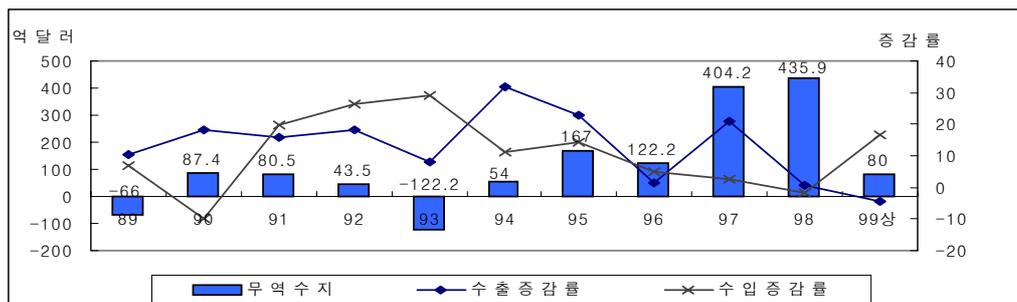
Ⅲ. 중국의 무역정책 추진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

1. 중국 무역정책의 특징과 전개과정

가. 중국 무역정책의 특징

중국 무역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개혁·개방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대외개방의 폭과 속도에 대한 완급을 조절하면서 일정한 주기를 갖고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외거래 규모 또한 급격히 증가하자 수출입 관련 정책의 기초 또한 수출입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그림 3>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 추이



자료 : 중국해관통계.

현재 무역규모는 중국 GDP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동향은 그대로 경제 부침(浮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중국의 수출 부진은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요인 외에도 국내경제 침체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수출입 추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중반 이후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로 중국도 경제침체 및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중국 무역정책의 기초가 크게 바뀐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시점인 1997년을 분기점으로 중국 정부의 관세·비관세장벽 조치와 금리, 증치세 등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변수에 대한 정책적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무역정책의 전개 과정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전인 1970년대 말까지 오랜 동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근거로 통제무역과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1970년대 말 이후 서서히 대외무역체제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보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까지 대외무역거래에 있어 여전히 비 규범적인 관세장벽을 유지하는 등 계획경제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1980년대까지의 중국 대외무역 개혁작업은 과거 사회주의의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제도 개선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GATT와 WTO가입을 위한 노력과 시장경제의 경쟁 원리를 전제로 하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즉 정부는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조치의 삭감·폐지, 무역제도의 정비, 무역관습의 투명성 제고 등의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²⁾ 1992년 봄 등소평은 선전(深圳) 經濟特區 등 중국 남부지역을 시찰(이른바 '南巡講話')하면서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은 존재한다. 계획과 시장은 모두 하나의 경제적 수단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개혁·개방정책을 더욱 매진할 것을 독려했다. 이를 기반으로 199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에서는 '社會主義市場經濟論'이 제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의 관행과 규범에 맞는 대외무역체제의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들어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중국은 상품수지

2) 馬成三, "中國の貿易自由化とその影響", 「富士總研論集」, 1997.11, pp.89~91

및 경상수지의 흑자추세가 지속되자 강한 자신감을 갖고 관세율 인하, 비관세장벽의 축소·폐지, 수출입기업의 대폭 확대 등 시장 개방과 무역자유화에 초점을 두고 대외무역의 개혁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주요 무역정책 추진 내용

(1) 관세율 인하

1991년 중국은 GATT 가입을 위해 향후 3~5년 내에 중국의 평균관세율을 당시의 절반수준으로 인하할 것임을 발표하는 한편, 1997년 필리핀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2000년까지 평균관세율을 개발도상국의 평균수준인 15% 내외로 인하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1~1999년에 걸쳐 모두 여섯 차례에 관세율이 인하되었으며, 평균관세율도 1992년 42.5%에서 1999년 1월 현재 16.8%로 무려 60% 이상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다(<표5>참조). 이러한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개도국 평균수준인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도 수입관세율 인하 조치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중국의 수출 감소와 함께 수입급증으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관세율 인하 조치가 있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폭에 한해 이루어질 전망이다³⁾.

<표 5> 중국의 관세율 인하 조치 추이(92~99년)

실시 시기	주요 내용
92년 1월	대상 품목은 25개(평균 수입관세율 : 42.5%)
93년 1월	대상 품목은 3,371개로 7.3% 인하(평균 수입관세율 : 35.9%)
94년 1월	대상 품목은 2,898개로 8.8% 인하(평균 수입관세율 : 36.0%)
96년 4월	대상 품목은 4,994개로 36.0% 인하(평균 수입관세율 : 23.0%)
97년 10월	대상 품목은 4,874개로 25.6% 인하(평균 수입관세율 : 17.1%)
99년 1월	대상 품목은 1,014개로 1.8% 인하(평균 수입관세율 : 16.8%)

자료 : 馬成三, “中國 市場開放の加速化とその影響”, 「貿易と關稅」(1998.4) 등.

3) 99년 초 시행된 관세율 인하의 내용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음. 당시 주요 관세율 인하 품목은 목재류와 제지류(1~9%→ 0%), 목제가공제품(18~21%→10%), 완구류(21%→10%), 기타 방직관련 제품(품목별로 1~5%포인트 정도) 등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이미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들로서 중국의 제품경쟁력이 강한 품목으로 알려짐. 따라서 금번 수입관세율 인하가 중국으로서는 수입 증대보다는 오히려 원부자재의 수입단가 하락에 따른 완제품 수출증대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수입허가 및 수입할당 대상품목의 축소

1980년대 초반부터 중국정부는 단일 지령성 계획관리에서 벗어나고, 무역 경영권한의 이양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수지의 균형과 수입질서 안정 및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수입할당제도⁴⁾ 등의 비관세장벽을 설치, 운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GATT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무역규범에도 부합되지 않아 지속적인 시정요구가 있었다. 중국 스스로도 시장경제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제약요소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1992년부터 연차적으로 무역관리체제의 정비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표 6> 참조). 이에 따라 중국의 수입할당·수입허가증 관리제도의 대상품목은 1992년 1,274품목에서 1997년 6월 말 현재 374품목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貿易自由化率(輸入割當 및 輸入許可證 管理對象品目 / 稅關 總品目 × 100%)은 1992년 80%에서 1994년 88%, 1997년에는 95%로 크게 높아졌다.

<표 6> 중국의 수입할당 및 수입허가증 관리 대상 폐지 추이

1993. 12	농약, 강재, 민수용 항공기 등 283 품목의 수입할당 및 수입허가증 관리 폐지
1994. 1	수입상품에 대한 「분류관리」 제도 폐지(필수품목을 지정, 수출입공사로 하여금 독점 경영토록 하는 한편, 나머지 대다수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함)
1994. 6	208 품목의 수입할당 및 수입허가증 관리 폐지
1995. 6	367 품목의 수입할당 및 수입허가증 관리 폐지
1995. 12	176 품목의 수입할당 및 수입허가증 관리 폐지
1996. 12	농약과 탄산음료의 수입허가증 관리 폐지, 다만 레이저디스크 제조설비 추가

자료 : 馬成三, “中國の貿易自由化とその影響”, 「富士總研論集」, 1997.11, p. 94.

(3) 수출입 기업의 대폭 확대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소수의 전문 수출입기업이 대외무역을 독점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가 무역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개혁·개방 이후 무역경

4)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외환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수입품목의 구조를 조정해 나가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두는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84년 1월 국무원이 공포한 ‘進口貨物許可制度暫定規定’ 및 동 施行細則의 규정에 의거 시행됨. 수입허가증은 중앙주무부처인 對外貿易經濟合作부와 각 省級 對外經濟貿易委員會에서 발급됨. 그리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제시장에서도 민감한 중요 수입 상품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대외무역 수출입총공사로 하여금 대리토록 하여 수입을 할당하는 제도를 말함.

영권한의 분산화 추진으로 무역권한을 받은 기업들이 급증하여 개혁개방 초기 10여 개에 불과하였던 수출입기업이 1997년 말 기준으로 약 16만여 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여전히 '무역질서의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무역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상품수출입과 기술수출입의 대외무역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⁵⁾ 이에 따라 국유기업을 포함한 상당수의 기업은 아직 직접적으로 무역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무역 허가제의 문제점은 특정상품의 지정경영(중요 상품의 수출입은 전문 수출입회사와 같은 특정 무역회사만 인정됨)으로 중국 내 기업간 불공정한 경쟁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2.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 무역정책의 기초 변화

무역자유화를 기본 입장으로 한 중국의 무역정책은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고 경제성장 또한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전기·전자제품 및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환율 단일화 과정에서의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가격경쟁력 강화 등으로 중국은 큰 폭의 수출 증가로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를 달성하자 중국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1997년 이전까지 중국이 추진해 오던 무역정책의 방향은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 증치세 환급률 인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수입관세 면제제도 철폐, 금리 인상, 위안화 절상 용인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적극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1997년 중반 시작된 동남아 외환·금융위기 이후 동남아를 비롯한 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급감과 이들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중국 제품의 상대적인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해 1998년 이후 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들자 무역정책의 기초는 수출활성화 및 수입규제로 급선회하였다. 이하에서는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가 중국 수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중국이 추진해 온 수출입 관련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5) 中國對外貿易法 第9條

<표 7> 1998년 이후 중국정부의 주요 수출장려 및 수입규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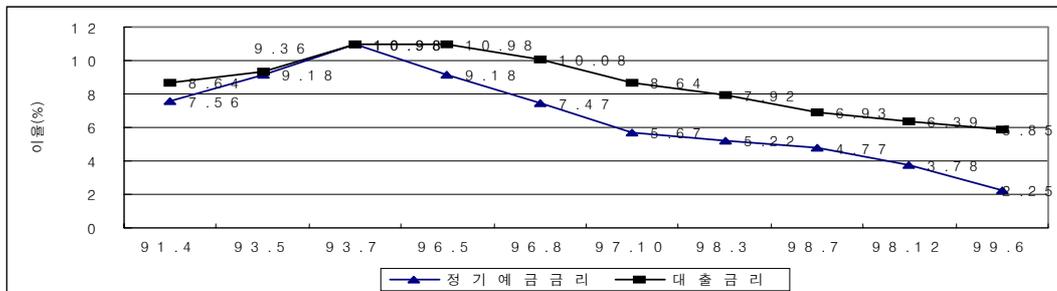
수출장려책	수입규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인하 · 증치세 환급률 인상 · 금융기관을 통한 수출금융 확대 · 지방정부의 수출 장려책 마련 허용 · 수출허가증 대상 품목 축소 · 사영(私營)기업의 수출입권한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밀수 단속 · 철강, 화학등 주요제품의 반덤핑 제소, 가공무역관리제도 변경을 통한 수입규제 등 비관세 장벽 강화 · 수입대금융 외화결제 관리 강화 등

가. 금리 인하

중국 정부의 수출 증대를 위한 주된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이다. 중국은 과거 2년간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처럼 빈번한 금리 인하 단행에는 이를 통해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만성적인 적자상황에 놓인 국유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과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국유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이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출확대를 제고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담겨져 있다.

최근의 금리 인하 추이를 보면 지난 1998년 12월과 1999년 6월 금리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올해 말 추가 인하 방침을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금리 인하의 시행주기도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정부의 경제 회복 및 수출 증대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수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로 정기에금금리가 2%대까지 떨어져, 올해 중 다시 금리를 인하하여 1%대까지 하락한다면 더 이상의 금리 인하 여지가 없어 이를 통한 경기 회복 및 수출 증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중국의 예대금리 추이(1년 만기)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각년도 등.

나. 증치세(增值稅) 환급률 인상

증치세⁶⁾ 환급률 인상 또한 작년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꾸준히 단행되고 있는 주요 수출증대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수입되어 중국에서 유통되는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외에도 증치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1994년 첫 시행 당시 환급률을 통상 17%(단, 농산 가공품 13%, 농산품 6%)로 설정하였으나 1995년 7월과 199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환급률을 인하하여 통상 9%(단, 농산 가공품 6%, 농산품 3%)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97년 중반 동남아 통화·외환위기 이후 수출 감소가 우려되자 다시 환급률을 인상하기 시작, 현재까지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환급률을 인상함으로써 현재 17%의 증치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에 대해 대부분 15% 이상의 높은 증치세 환급을 시행함으로써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표 8> 현행 품목별 증치세율 및 증치세 환급률

단위 : %

품목	증치세율	증치세환급률
기계설비, 전기·전자제품, 수송기계, 계측기기	17	17
방직제품	17	17
농업용 기계	13	13
방직원료(방직제품 제외), 시계, 신발, 도자기류, 철강 및 동제품, 시멘트	17	15
화학원료, 도료, 염료, 안료,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완구 및 운동용품, 가방 및 여행용품, 알루미늄, 아연, 납	17	15
석탄, 농산물을 원료로 한 공산품	17	13
식용곡물	13	13
농산물(식용곡물 제외)	17	5

자료 : 외교통상부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

6) 증치세란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것으로 재화의 판매, 수입, 가공, 수리 및 용역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임. 증치세율은 기본적으로 17%이나, 식용곡물, 석탄가스, 도서, 비료, 농업용기계 등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13%임. 중국은 수출지원책의 일환으로 수출용품을 만드는데 사용된 원자재의 구입이나 수입 후 이를 수출할 경우 부과된 일정비율의 증치세액을 환급해줌(따라서 이를 '증치세 환급률'이라 함).

다. 기타 수출장려 및 수입억제 정책

이외에도 중국은 각종 수출 장려책을 추진해 왔는 바, 주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영기업(私營企業)에 대한 수출입 권한 확대이다. 중국정부는 수출증대의 일환으로 사영기업에 대한 수출입권한을 늘리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사영기업이 수출입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허가 받지 못한 일반 사영기업이 수출입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고 허가 받은 대외무역기업을 통해야 만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사영기업이 이러한 번거로운 수출입절차를 거칠 경우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금년 1월 5일 일정자격⁷⁾을 갖춘 20개 사영기업에 독자적인 수출입권한을 부여하였으며, 2월 15일 추가로 41개 사영기업에 대한 수출입권한을 부여하였다. 현재 중국 내 사영기업 수는 전국적으로 100만여 사 이상인 점으로 미루어 향후 사영기업에 대한 수출입권한 부여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둘째, 수출허가증 대상품목 축소이다. 중국에서는 고시한 일정 품목을 수출코자 할 경우 수출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수출허가증이 수출 확대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하에 1998년 초 니켈, 알루미늄, 폐철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증 발급 대상 품목에서 제외시킨 데 이어 금년 1월초에는 수출허가증 발급 대상품목을 종전의 115종에서 58종으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기업들의 수출 제고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셋째, 가공무역 기업의 원부자재 수입 감독 강화, 철강 수입 규제 등 각종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으로써 강력한 수입억제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 세관당국은 금년 10월 1일부터 가공무역관리제도를 변경하여 불성실기업과 제한물품에 관해서는 종전 가공무역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와 증치세 면제를 유보한다고 발표하였다⁸⁾. 이 조치에 따라 플라스틱원료, 합성섬유원료, 면직물, 철강 등 7개 품목은 제한품목으로 지정되어 수입 시에는 관세 및 증치세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이용한 완제품의 수출 후 환급 받도록 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이러한 가공무역 기업의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감독 강화는 수입관세와 증치세 면제 혜택을 받은 가공무역용 원자재가 불법적으로 중

7) 등록자산이 850만 위안 이상이며, 2년 연속 계속하여 판매수입이 5천만 위안,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단, 기계전자제품 생산기업은 판매수입이 3천만 위안, 수출액이 50만 달러 이상)인 사영기업에 수출입권한 신청 자격을 부여함.

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 가공무역관리제도 변경으로 대 중국 수출업체 타격 우려” 「수은조사월보」, 1999. 6, pp. 87~88 참조 바람.

국 내수시장으로 유출되거나 밀수를 차단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수입 억제를 통해 중국의 상품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3. 향후 중국 무역정책의 방향과 전망

가. 기존 무역정책 고수의 한계 노정

1998년 이후 중국 무역정책의 기본 논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확대 및 수입규제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출입 동향 및 상품수지 흑자추이를 보면 중국정부가 의도한 바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하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수출확대, 수입억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추론해 보건대 세계무역환경, 중국 상품의 품질경쟁력 제고 등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은 이상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않다. 중국의 수출 확대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 나라를 비롯해 일본,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회복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중국 수출이 활기를 띠는다면 중국은 지금까지의 무역정책 기조를 바꾸어 '위안화 평가절하'라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무역 환경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리 유리하다고 볼 수 많은 없다. 아시아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반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들 국가들 또한 수출 확대를 통한 일정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상, 중국의 상품이 파고들여지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이들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상당 폭의 하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위안화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대적인 위안화의 고 평가에 따른 제3국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 외부의 경제여건이 중국 수출 증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어느 시점에 가면 중국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무역정책의 선회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기저에는 위안화 평가절하가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새로운 대안 : 위안화 평가절하

기존 무역정책의 한계 노정으로 인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 단기간 내 중국의 무역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평가절하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평가절하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 가능성이 주기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중국경제를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기존 무역정책의 한계성으로 인해 위안화가 평가절하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수출부진으로 인한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는 위안화 절하 가능성을 예견케 하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된다¹⁰⁾. 1979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중국은 상품수지 흑자 폭이 대폭 축소되거나 혹은 적자로 반전될 경우 위안화 가치 하락을 통해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일정수준의 상품수지 흑자를 유지코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상품수지 흑자 폭 감소추세 지속은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추진하려는 좋은 유혹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수출확대를 위한 기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금리를 인하한 경우 이미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2%대로 하락하였으며, 조만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1%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처럼 금리가 하락할 경우 현재 40%에 달하는 저축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 지에 의문이 생기며, 또한 저축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장담하기 어렵다. 증치세 환급률 인상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수출확대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이미 수차례에 걸친 증치세 환급률 인상으로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 증치세율 수준인 17%를 환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심리 자극을 위한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역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동안 추진해 온 제반 경기 활성화 및 수출 장려책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하를 고려할 것이다.

9) 이에 대해서는 줄고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 분석", 「수은조사 월보」, 1999.3, pp. 22~26 참조 바람.

10) 과거 중국은 상품수지 흑자 폭이 줄거나 혹은 적자로 반전될 경우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통해 무역구조를 개선케 하는 조치를 여러 번 취하였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게서, pp. 18~20 참조 바람.

셋째, 위안화 가치를 계속 안정시키는 데에는 정치·사회적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현재 적자 난에 허덕이는 대다수의 국유기업들은 위안화 절하를 주장하고 있다. 국유기업들의 수출부진의 주원인이 바로 위안화 고평가에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유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파산 혹은 비용절감차원에서의 고용인력 축소는 곧바로 실업 증대로 이어져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위안화 평가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중국 국유기업들은 당·관료들의 기업경영 개입, 과도한 복지후생체제 및 과잉인력 문제 등 고질적인 병폐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속성상 이러한 문제들이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상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단기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지난해 3월이래 수 차례에 걸쳐 국제금융계 혹은 홍콩을 통해 위안화 절하설이 불거져 나왔고, 그 때마다 다이샹룽(戴相龍) 인민은행장 등 중국 고위층의 '절하 불가론'이 발표되었다. 위안화 절하는 중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에 따른 홍콩 금융시장과 국제금융계의 파장 그리고 동아시아 주변국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국제적 사안이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결국 누구도 절하시기를 정확히 예견하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와 같은 수출부진과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중국 지도부의 계속된 '절하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현실화될 것이다.

다. 중장기적 과제 : 수출품목의 고도화와 품질경쟁력 강화

중국 수출 확대의 관건은 수출상품의 구조개선, 품질향상에 따른 품질경쟁력 강화에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국민경제의 기둥이 되는 지주산업의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¹¹⁾.

현재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냐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어렵다. 다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갈음해 보고자 한다. 중국 수출품목의 고도화 과정을 단적인 사례는 섬유제품과 기계·전자제품의 수출비중 역전현상 발생이다.

11) 1994년 4월 정부는 '90年代國家產業政策綱要'를 발표한 바 있음. 이를 통해 중국은 경제의 근간인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 인프라스트럭처와 기초산업의 낙후상태 개선, 기계·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설업을 국민경제 진흥의 4대 지주산업으로 발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중요 과제로 선정함.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공업제품은 중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들어 이러한 경공업제품의 수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동반하여 수출 품목도 섬유, 신발류를 중심으로 한 단순 경공업제품에서 점차 기계·전기제품으로의 구조 변환을 꾀하여 왔다. 그 결과 90년대 중반부터 기계·전기제품의 수출이 급증하였고, 특히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해진 경공업제품의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98년부터 기계·전기제품이 섬유제품의 수출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총 수출에서 기계·전자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38.3%로 98년의 33.8%에 비해 4.5%포인트 상승하여 우리 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타 주력 수출품목인 섬유제품과 수송기기의 경우 98년에 비해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계·전자류의 수출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은 이 분야의 수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 나라와 중국과의 수출구조 추이를 비교해 볼 때 양국 모두 기계·전자류가 가장 많은 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어 점차 이 부문에 있어서의 한·중간 수출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타 분야의 경우 한국은 자동차·선박을 중심으로 한 수송기기와 철강 등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섬유제품과 완구류 등의 주력 수출제품으로 자리잡고 있어 여전히 경공업제품 위주의 수출구조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한국·중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 비중 추이

구 분	단위 : %									
	1995		1996		1997		1998		1999.1~6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섬 유 제 품	14.2	24.1	13.5	23.1	13.4	23.6	12.4	21.7	11.9	21.5
기 계·전 자	40.3	18.6	37.4	20.6	35.7	20.9	33.8	23.9	38.3	24.1
수 송 기 기	14.1	2.8	15.4	2.8	14.9	2.9	15.8	3.5	14.5	3.7
가 구·완구류	1.4	6.4	1.3	6.7	1.1	7.0	1.0	7.3	1.1	7.0

주) HS 2단위 기준.

자료 : KOTIS, 중국해관통계.

(2) 무역 및 투자자유화 : WTO 가입과 효과

최근 중국과 미국간 WTO 가입 논의가 재개되면서 중국의 WTO 가입이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WTO 가입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비관세장벽의 철폐, 관세율 인하, 금융, 서비스업 투자 개방 등의 무역자유화 정책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제도 철폐에 따른 외국기업의 내국민대우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외자우대조치의 철폐 및 삭감은 외국인의 대 중국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관세율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축소는 기업의 기계설비와 원부자재 수입 비용을 줄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기계설비 수입면제조치의 철폐가 가져오는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무역·투자자유화정책은 외국인의 대 중국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로 인한 손실보다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국내 금융, 통신 등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시장 개방, 수출입 할당제 폐지 등 각종 비관세장벽과 추가적인 관세율 인하 등으로 중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대외 신용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외자유입이 증대될 것이고, 이러한 외국자본과 기술 유입은 중국의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WTO 가입국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데 노력함으로써 중국의 경제개혁이 보다 가속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¹²⁾.

IV.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이상에서 본 고는 최근 중국의 수출구조 및 무역정책의 변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MF 이후 우리 나라의 대 중국 경제협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999년 1~6월중 대 중국 수출은 63.1억 달러로 제3위의 수출대상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67.8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한 일본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의 수출구조 변화와 무역정책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경제의 활로 모색을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12) 김정균·황동연, “중국의 WTO 가입 전망과 대응전략”,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9.7.28

첫째, 현재로서는 위안화 절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지라도 언제라도 다시 불거져 나올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각 기업들은 나름대로의 위안화 절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위안화 절하가 우리 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음은 이미 국내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표 10〉 국내 주요기관의 위안화 평가절하시 우리 수출 감소효과 분석

단위 : 억 달러

평가절하 폭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KOTRA
10%	25.2	11~13	11
20%	-	19~24	37

자료: 신현수,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1998.

이상형,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해외시장」, KOTRA, 1999. 8

유진석, "진통을 겪고 있는 중국경제와 위안화 환율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999.9

그러나 이는 단순히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관점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본 위안화 절하의 파급효과는 영향을 달리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에도 사업목적인 중국 내수형이나 아니면 제3국 수출형 이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달리 받을 수 있다.

중국과의 수출경쟁이 크지 않은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경우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이미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 및 의류, 신발류 등 경공업 제품과 중국이 독자적으로 생산 가능한 소형TV 등 가전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공업제품은 IMF 체제 이후 우리 나라 원화 가치의 하락을 기회 삼아 수출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나 위안화 절하 시에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의 거대시장을 목표로 투자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최근 중국 내수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가 절하되면 원부자재의 수입가격 인상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수도 있으므로 생산제품의 일부는 수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중국의 WTO 가입과 향후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중국 상품의 수출구조 개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는 우리와의 해외시장에서의 수출경쟁을 심화시키는 한편 중국시장 수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자동차, 반도체 등 극히 일부 품목만을 제외하고는 공업제품의 상당부분이 우리 나라와 경쟁관계에 돌입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대 중국 진출 또한 IMF 이후 크게 줄어들면서 대 세계 수출뿐만 아니라 대 중

국 수출에 있어서도 급격한 신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중국의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가 고도화의 길을 걷고, 중국의 WTO 가입이 개도국지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일반특혜 관세제도(GSP : General System of Preference)의 혜택을 받아 중국이 경쟁력을 갖춘 경공업제품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수송기기, 기계류 등 우리의 주력 수출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관련업종에 대한 중국 내 시장흐름, 기술수준 및 개발속도,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산업구조 개선은 자본재의 수입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곧 우리에게 새로운 수출확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중국의 수입 증대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자본재나 기계류 수입 증대에 기인한 것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구조변화에 따른 산업 내 보완구조를 활용해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출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우리나라와의 수출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임은 분명한 이상,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율 변동에 중립적인 수출구조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향후 중국의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임에 대비하여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그 동안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여 왔던 정보통신업, 금융업, SOC 사업 등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이므로 이 분야에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기업들은 시장 선점의 차원에서 중국 진출 계획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기업들은 IMF 체제하에서의 자금난으로 해외투자 뿐만 아니라 국내설비투자에도 인색하였으나 중국시장은 현재 우리경제가 IMF보호체제 탈피에 중요한 전략적 국가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중국 진출을 소홀히 하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위험이 큰 대규모 설비투자 위주의 진출보다는 라이선싱, 견실한 중견 국유기업의 M&A¹³⁾ 등 투자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 유형 역시 독자진출보다는 일본, 홍콩, 대만 등지의 관련기업과의 합작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3) 최근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새로운 진출방식으로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M&A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음. 대 중국 국유기업의 M&A 동향과 장단점 등에 관한 내용은 수출입은행 「수은조사월보」 1999.10월 호에 실린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M&A 활발”이라는 지역정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중국 무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1998년 이후 잦은 수출입제도의 변경으로 국내의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기업들조차도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러한 제도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기업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별 한국상회 등 협의체 구성 강화를 통해 제도적 변화 내용을 현지 진출기업 및 국내 유관기관에게 시의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全善俊】

< 참고 문헌 >

1. 김정균·황동언, “중국의 WTO 가입 전망과 대응전략”, 「VIP Report」,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9.7.28
2. 신현수,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과 우리수출에의 영향”,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1998. 10
3. 吳勇錫. 「中國의 신무역관리제도와 무역구조 변화」,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1997.9
4. 유진석, “진통을 겪고 있는 중국경제와 위안화 환율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999.9
4. 이상형,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과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해외시장」, KOTRA,, 1999. 8.3
5. 全善俊, “중국의 대외무역 동향과 한·중간 수출경쟁관계 비교 분석”, 「수은조사월보」, 한국수출입은행, 1999.2
6. ———,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 분석”, 「수은조사월보」, 한국수출입은행, 1999.3
7. ———, “중국 가공무역관리제도 변경으로 대 중국 수출업체 타격 우려”, 「수은조사월보」, 한국수출입은행, 1999.6
8. ———, “중국 경기부양에 총력”, 「수은조사월보」, 한국수출입은행, 1999.7
9. 馬成三. “中國の市場開放の加速化とその影響”, 「貿易と關稅」, 1998. 4
10. ———. “中國の貿易自由化とその影響”, 「富士總研論集」, 富士銀行, 1997.11
11. 三菱總合研究所編, 「中國情報ハドブック 1998年版」, 蒼蒼社, 1998. 6
12. 新宮健 外4. “減速する中國經濟と人民元切り下げ觀測”, 「財界觀測」, 野村綜合研究所, 1998.8,
13. 日本貿易振興會編. 「1999年版 ジェトロ白書, 貿易編」, 日本貿易振興會, 1999
14. 中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編委會. 「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 1998」, 經濟科學出版社, 1998
15. 中國統計局編. 「中國統計摘要」, 中國統計出版社, 1999
16. 海關統計編輯部. 「海關統計」, 中國海關總書, 1998. 12